

기획특집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 현황과 쟁점

- 지역사회의 안전과 돌봄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제
신경아 |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와 성폭력
강은영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성폭력 피해자 권리 관점에서 본 성폭력 방지대책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지역사회의 안전과 돌봄시스템 개선을 위한 과제

신 경 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연일 아동성폭력, 성인여성 성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12월 대선을 앞뒀 대선후보들의 행보에 관한 소식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사고 공분(共忿)을 일으키는 사건은 단연 성폭력 범죄다. 지난 2-30년 동안 성폭력 사건에 대해 이렇게 크고 지속적인 관심이 언론에 제기된 적이 있을까? 특히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는 기사의 양도 넘쳐나지만,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때문에 요사이 사람들을 만나면, “왜 요즘 이렇게까지 성폭력 사건이 많은가?” 하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폭력 범죄를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재촉도 당한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없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성폭력 사건이 요즘 들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폭력 사건은 우리 주변에 늘 있었고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만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관심이 적었고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로 설정하려는 의지,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프레임’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안 역시 여러 차례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을 수용하려는 노력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가려는 정치권력과 행정부의 의지가 불투명했다.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력 집단이 남성 중심적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 성폭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서구사회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이래 젠더 정치의 중요한 아젠다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안전 문제는 교통안전 등의 수준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에 관한 문제제기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전은 단순히 폭력과 범죄의 처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갖추어질 때 보장될 수 있다. 아동의 안전 역시 폭력과 범죄 피해를 처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아동이 생활하는 일상적 환경의 안전이 보장될 때 근본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 이 글은 2011년도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사업으로 진행된 두 개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의 아동의 안전 실태와 문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¹⁾.

1. 지역사회 아동 안전의 실태와 문제

1) 정확한 실태 파악의 필요성

아동의 경우 안전과 관련해 가장 취약한 집단은 성인의 돌봄 없이 혼자 생활하는 ‘나홀로 아동’이다. 나홀로 아동의 학술적 용어는 자기보호 아동(self-care children)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현재 정확한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에서 ‘나홀로 아동’의 숫자를 발표해 왔으나,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6세이상 18세미만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자기보호 아동의 정의(초등생이하)와는 거리가 있다. 2011년도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자기보호 아동을 초등생까지로 정의하여 학교별로 조사하였으나(약 100만명으로 추산) 지역연대 16개 모범지역을 층화표집한 결과이므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자기보호 아동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각 학교에서 학급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규모와 대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낮은 안전 인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불안 수준은 높지만 준비도나 실천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보호 아동의 학부모 조사에서 60%의 응답자가 자녀의 성폭력, 유괴, 화재,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만, 학교와 집 주변 등 아동의 생활공간이 갖는 안전성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7월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유아 26.6%, 초·중학생 23.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학교와 학교 주변, 친구 집 등이 위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PC방(88.4%)을 제외하면 다른 곳들은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특히 자기 집(3.3%)과 학교(8.6%)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극히 낮았다.

이에 비해 교사들은 훨씬 더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방과 후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PC방, 만화방(84.8%)은 물론, 학교 근처 골목길(78.4%), 학교 앞 도로(69.4%), 학교 운동장 및 놀이터(49.9%) 등이 모두 안전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대조적으로 아동은 가장 낮은 안전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한 예로, 놀이터나 동네 골목길에 대해서도 70%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아동과 부모의 인식상의 격차이다. 자기보호 아동의 학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적절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들의 생각은 달랐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자기보호 방법에 대해 부모나 교사로부터 배우고 상담한 경험이

1) 참고자료: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1)
‘지역연대 운영 평가 및 컨설팅’ (여성가족부, 2011)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34.7%에 머물러, 이를 가르치고 있다는 학부모의 응답 88.2%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동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지 않으며, 그 결과 자신이 부모나 교사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동이 자기 보호 아동의 2/3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지역사회 차원의 돌봄시스템 부재

아동과 여성의 안전은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차원에서 확보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아동과 학부모, 교사 등 안전관련 당사자들이 가장 낮은 관심과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는 영역이 지역사회 차원의 협력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관심과 대화, 교육은 수행하고 있지만,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아동의 47.4%는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연락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른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학교 내 방과 후 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해서 교사의 지지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학교와 주변 환경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아동 돌봄 시스템도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4) 사회적 돌봄서비스의 제한성

자기보호 아동의 안전은 부모나 돌봐줄 성인의 부재를 대신할 사회적 돌봄체제를 확립하고 혼자 남겨

진 아동이 없을 때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동의 사회적 돌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돌봄 시스템은 주로 저소득층 아동 보호에 맞추어져 있다. 그 결과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중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은 전체 필요 아동의 7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현재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며, 저소득층, 한 부모, 조손 가정 등 취약집단 아동의 보호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돌봄 교실 등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관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교급식지원대상 등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적 서비스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중산층 맞벌이 부부 자녀는 제외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자기보호 아동 중에는 맞벌이 부부 가정 아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산층 가정도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학원 수강 시간 이외에는 자녀를 홀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재와 같이 지역아동센터나 돌봄 교실을 저소득층 자녀로 한정하였을 경우 낙인 효과가 지속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조사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의 경우 저학년 때는 부모 손에 이끌려 오게 되지만, 고학년이 되면 친구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센터를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우려는 학부모도 가지고 있는데, 초등 돌봄교실에 자녀를 맡기는 어머니들 중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저소득층 자녀로 한정할 경우 계층별 고립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 또래집단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자녀에 돌봄 서비스가 집중되어 온 이유는 정부의 재정자원을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판단에 있다. 그

러나 중하층 맞벌이 가족의 경우 부부가 모두 취업을 함으로써 소득 수준은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자녀의 방과 후 돌봄 비용을 개별 가정이 전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²⁾. 중하층 맞벌이 부부 가정의 자녀들은 학원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부모가 올 때까지 혼자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8년 대구의 초등학교 학생 100여명이 연루된 집단 성폭행 사건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빈곤층은 아니지만, 맞벌이 부부가 많은 중하층 서민 지역 학교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저소득층 아동보호에서 중산층 맞벌이 가정 자기보호 아동을 포함한, 수요자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개편해야 한다.

5) 아동의 생활실태와 욕구에 부합하는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

주말 돌봄의 공백: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50% 이상은 주중에만 운영한다. 따라서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에는 아동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학교에 따라 토요일 돌봄교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나 아직 소규모이며 각 프로그램간의 연계성도 확인된 바 없다. 조사에서 주말까지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만 있는 아동은 전체 자기보호 아동의 28.6%이며 특히 7일 내내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은 22.7%로 나타났다.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과 공휴일, 방학 중에도 아동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야간 돌봄의 필요성: 조사 결과 하루 5시간 이상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은 23.5%로 전체 자기보호 아동의 1/4에 달했다. 3-5시간 자기보호 상태에 있는

아동까지 포함하면 47.7%로 전체 자기보호 아동의 절반가량이 3시간 이상 성인의 보호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오후 6시 이후의 저녁시간과, 9시 이후의 심야 시간대에도 아이들끼리만 있어야 하는 아동이 적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시간제 돌봄의 필요성: 본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집에 두는 이유는 학원 시간에 맞추어야 하는 이유(36.1%)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원 수강이외의 시간에 아동들은 자기보호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학교 수업 종료 후 1-2시간 후에 시작되는 곳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제 돌봄 시설을 마련하여 방과 후 학교나 학원 수강 도중, 또는 수업이 끝난 후 부모의 귀가 시까지 아동을 돌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율형 돌봄의 필요성: 조사에 따르면 아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조사에서 '아이들이 집에 있고 싶어 하여 그대로 둔다'는 응답이 12.7%였고, 아동 조사에서도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아동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의 설계에서 아동의 욕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동들이 필요할 때 찾아와 쉬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율적 돌봄 공간이 필요하다.

²⁾ 방임아동 100만 시대, 저소득층의 아동 방임이 아닌, 일반 가정의 일상적인 정서적 방임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보도, (중앙일보, 2010년 5월 5일자, / KBS 2TV 추적60분, 2012년 5월 26일자, '위기의 아이들 3: 실태보고-나홀로 아이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아동 돌봄에 대한 당사자들의 욕구를 수용하고 서비스의 현실적합성을 향상 시키며 다양한 선택(multiple choices)의 가능성을 열어갈 필요가 있다.

6) 개입주의 정책의 필요성

현재 한국의 가족정책에서 원칙적인 규범의 하나는 아동 양육의 책임과 결정권을 가진 것은 부모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빈곤과 이혼,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에 있는 가족에서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책임과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나주’ 사건이나, 그동안의 경찰청 발표에서 자기 집에서 성폭력을 겪는 아동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보아도 ‘가족’ ‘가정’ ‘집’ 이 더 이상 아동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먼저 겪은 선진국의 경우 아동학대에 대한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법제를 마련하고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intervening policy)을 실시해 왔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동의 생활실태와 발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할 공적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이러한 역할을 전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별, 지역별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과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자격과 역량을 갖춘 전담 요원들을 배치해가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7) 성인지적 관점의 필요성

본 조사는 물론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여성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반대로 남성들의 경우 안전에 대해 둔감하거나 명확한 문제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다수의 안전 사건에서 가해자는 남성이며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이나 타인의 삶에 끼치는 해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안전 정책은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에서 여아와 남아에게 필요한 각각의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을 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학부모와 교사에 대해서도 젠더 차이를 고려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아버지 교육이 필수적이며, 가족과 학교, 지역사회 안에서 남성 성인과 남아들의 의식과 태도,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기보호 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

1) 여성 · 아동을 위한 안전체계의 조직

2011년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의 3/4 정도가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한다는 사실(www.sex-offender.go.kr)을 고려할 때 아동이 거주지인 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성하는 과제는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의 안전망은 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전제로 할 때 의도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국가와 지방정부의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안전정책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그 틀 속에서 지역사회와 생활권 단위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

축해나가야 한다.

- ① 중앙정부 수준 : 아동·여성 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의 위상 강화 및 중앙관리센터의 설치
- ② 광역자치단체 수준 : 광역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현실화
- ③ 기초자치단체 수준 : 기초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현실화
- ④ 생활단위(동) 수준 : 통·반장, 주민 리더 조직
- ⑤ 개별 학교 수준 : 학교안전위원회 및 자기보호 아동 보호 시스템 구축
- ⑥ 개별 아동 수준 : 긴급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과서비스 제공

2) 법제도의 정비

가. 방과 후 돌봄 관련 법제화

정부 부처 간 연계, 관련 사업간 연계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방과 후 아동 돌봄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18대국회 「학령기아동·청소년보호와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2008. 7. 10.). 이 법에서 각 부처의 관련 정책간의 협력과 연계 및 통합, 전달체계, 합리적 지원 및 감독을 위한 운영체계 등을 명시하며, 통합적 방과 후 활동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을 협의하는 협의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안전’ 개념의 법제화

- ① 「여성발전기본법」에 ‘안전’ 개념 명시
- 「여성발전기본법」에 안전 개념을 명시함으로써

안전을 여성정책수립의 주요영역이자 목표로 설정하고, 이 법에서 아동의 안전(생활안전, 성폭력·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 개념을 명시하며 정기적 안전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 ② 그밖에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건강가정지원법」 등에 안전 개념을 명시하고 관련 중장기 계획에서 실현해 가도록 한다.

③ 여성폭력 방지 관련 법의 개정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여성폭력 방지 관련 법의 개정하여 ‘안전’ 개념을 명시하고 지역연대 활동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한다.

3) 안전 교육의 전면적 확대

가. 아동 안전 교육 확대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전을 위한 정책의 설계와 집행 단계는, ‘정책과 입법의 형성→조직과 기구의 정립→연대와 네트워크 배양→실무자 교육→지역사회 교육 확대→개인적 지식과 능력 강화’로 구축된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해 왔지만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는 과제는 이제 막 첫 걸음을 뗀 수준이며, 특히 당사자인 아동과 여성의 자기보호 능력을 함양하고,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의 인간적·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개개인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가질 때 실현된다. 조사 결과나 신문보도를 참고할 때 위기 상황 시

아동의 대처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7월 경찰청 원스톱센터 수집 자료에 의하면, 2회 이상 성폭력 피해를 겪는 비율이 유아 25.9%, 초등학생 31.9%, 중학생 30.0%, 고등학생 21.3%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경우 피해자의 상당수가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 상황의 발생도 ‘유인’이 가장 높아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성인보호 아동에 비해 성폭력, 범죄와 폭력, 음란물 노출에서 더 많은 피해를 겪고 있지만, 반대로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을 더 모르고 실천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보호 아동 학부모들은 아동의 안전교육 강화를 첫 번째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보호 아동을 비롯한 전체 아동의 안전 의식과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 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 자료와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며, 안전 교육 강사도 양성해 가야 한다. 또 아동 안전은 교육보다는 시뮬레이션(simulation)에 의한 훈련(training)의 방법으로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교사의 안전 지도(指導) 능력 강화

교사는 학교 안팎에서 자기보호 아동의 일상생활을 가장 긴 시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 안전 확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교사는 성폭력과 범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식과 기술, 상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부모 등 성인에 의해 방임 상태에 놓은 아동 사례를 발굴하고 상담하여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

다. 본 조사결과나 그동안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문적인 조사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가해 아동이나 가해자 부모들은 모두 사건을 덮으려 하지만, 피해 아동 역시 진술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이 대응하기가 어렵다. 학교에서도 교장이나 교감 등 책임자들은 사건을 드러내기보다는 축소하려는 경향이 많아 일반 교사가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조사 결과 교사의 62.3%만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연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교사 발령 1년 이내의 신규 임명 교사들에게 성폭력 예방 및 안전 교육 연수를 제도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규 학교교사 이외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 후 아카데미, 방과 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조사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 중 아동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발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밤늦게까지 돌봄전담교사 1인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어 그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아동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다양한 기관의 교사들에게도 안전 교육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고 할 수 있다.

다. 부모 교육의 현실화

본 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 것은 아동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 수준은 높으나 보호 능력은 취약하며, 아동과의 인식상의 격차도 매우 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과 의미를 인식하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천

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불안 수준은 더욱 높은 데 비해,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약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 실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저소득층 아동은 폭력 피해 경험이 더 많고 안전 실천 수준은 낮다. 또 어머니보다는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으므로 아버지 안전 교육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본 조사 결과, 안전교육을 받은 학부모의 경우 안전 실천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 안전에 대한 부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며, 현재 공지문 형식과 일부 집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좀 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맞벌이 부부 등 일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부모들을 위해 집합교육의 경우 저녁이나 주말시간을 이용하며, 온라인 교육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4) 학교의 안전 지원 기능 확대

학교는 모든 학령기 아동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경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은 별도 공간 확보 및 시설비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학교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방과 후 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전국 초등학교에 아동 안전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전문적 서비스를 아동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각 기관들에게 연계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전담 인력을 배치해 각 학교별 자기보호 아동의 수와 생활

실태, 안전 상황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조사를 수행하고 각 기관과의 연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다양화

계층통합형 돌봄모델 수립 등 돌봄과 교육의 균형을 갖추고, 질적으로 우수한 사업 수행을 통해 21세기형 새로운 아동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향후 방과 후 돌봄의 질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근거지이자 모델로 정립해 가도록 한다.

6) 돌봄환경 정비와 공간 마련을 위한 조례 제·개정

가. 방과 후 자원조례 제정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 지자체 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별 방과 후 돌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서비스의 개발과 운영을 관장한다.

나. 공공건물 이용에 관한 조례 제정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공공건물이나 공공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시설에 법적 자격을 부여하고 공공 건물 이용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한다.

다. 아동안전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

놀이터, 공원 등 아동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공간을 아동안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여기서 아동 안전에 위해한 행위 - 음주, 흡연, 도박, 위해 약품 사용, 및

폭력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며, 놀이터에 성인 감독자를 두도록 하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놀이터 지킴이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이를 조례에 포함한다.

7) 돌봄과 안전의 이중 연대

가. 방과 후 돌봄지원센터 운영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연계를 증진하기 위해 방과 후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 2009). 지역아동정보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드림스타트센터 등을 통합한 돌봄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거나 드림스타트센터 등 기존의 한 기관을 중심으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아동·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연대의 활성화

현재 각 지역에서 구축, 운영되고 있는 지역연대를 효과적인 지역안전체계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예산·인력의 확충, 총괄 운영을 위한 중앙센터의 설립 등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맺음말

아동의 안전은 근본적으로 돌봄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학교든 가정이든 또 다른 곳이든 성인의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아동의 안전은 보장될 수 있다. 또 부모와 학교, 지역사회가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지식과 경험·능력을 가질 때 아동의 안전은 실현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최저 소득층 일부 아동만을, 그것도 한정된 시간에만 돌볼 수 있는 돌봄시스템으로는 아동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 많은 아동이 피해자가 되기 전에, 더 많은 아동을 가해자로 키우기 전에 우리 사회의 돌봄시스템을 돌아보고 전면적으로 혁신해가려는 실천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2011),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실태조사」, _____ 「지역연대 운영 평가 및 컨설팅」.
- 중앙일보, 2010년 5월 5일자.
- KBS 2TV 추적60분, 2012년 5월 26일자, '위기의 아이들 3 : 실태 보고-나홀로 아이들'.
- www.sexoffender.go.kr

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와 성폭력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성폭력범죄 예방전략과 정책

1) 성폭력범죄 예방전략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이래 성폭력범죄의 예방은 국가정책적 대상이 되어왔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서구의 성폭력범죄 예방전략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으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그 전략적 패러다임을 수정해왔다. 이제까지 제시된 성폭력범죄 예방전략의 패러다임은 크게 결함중심 예방전략과 능력중심 예방전략¹⁾,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예방전략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²⁾.

가. 결함중심 예방전략과 능력중심 예방전략

첫 번째 성폭력 예방전략은 ‘결함중심 접근(deficit-oriented approach)’이다. 이 전략은 성폭력에 수반될 수 있는 살인이나 상해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성폭력 위험상황에 처하게 되면 피해자는 저항이나 도피를 포기하고 수동적으로 대처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어 등장한 성폭력 예방전략은 ‘능력중심 접근(ability-oriented approach)’이다. 1983년 미국성폭력대책연합(National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NCASA)은 결함중심 예방전략을 비판하고 성폭력 위험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능력중심 예방전략은 아동과 여성의 ‘역량강화(empowerment)’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험상황에 대한 인식을

1) 이원숙 (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학교출판부, pp. 363-372 참고

2) 이현혜, 강은영, 이현숙, 하지영 (201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천매뉴얼 개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pp.51-54, 재구성

향상시키고, 대처 기술을 익힐 것을 권고한다.

능력중심 예방전략의 기본적 전제는 다음과 같다.

- 지식은 두려움과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힘과 통제력을 증대시킨다.
- 어느 누구도 무력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의 기술과 장점, 능력을 가지고 있다.
- 개인의 자기방어기술은 신체적 능력뿐 아니라 심리적 능력도 포함한다. 따라서 자기방어능력에는 자기방어무술의 습득, 자기주장, 자기신뢰 등이 포함된다.
- 어떤 피해자도 완전히 무력하지는 않으며 반대로 어느 가해자도 전능하지 않다. 모든 가해자는 잠재적 피해자가 자기방어에 성공할 수 있는 신체적 및 심리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 모든 자기방어가 성공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방어노력들이 성공적일 수 있다. 잠재적 피해자에게 모든 심리적 및 신체적 자기방어기술들을 알려주고 습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개인적 두려움, 행동패턴 및 생활양식에 대한 분석은 성폭력을 회피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전략에 기반하여 ‘두려움에 대한 대안적 프로그램(Alternative to Fear)’, ‘아동 역량강화 프로그램(Child Empowerment Service)’ 등이 제시되었으며 오늘날 학교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의 핵심적 내용인 “싫어요”라고 말하기, 위험상황에서 달아나기, 자기주장 훈련 등의 자기방어기술 역시 이에 기반하고 있다.

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예방전략

능력중심 전략과 같은 전통적인 성폭력예방교육은 피해자에게 관련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를 강화하며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프로그램이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 예방의 부담을 과도하게 지워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성폭력 예방전략의 변화가 요구되었다. 성폭력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그 대부분은 피해자의 통제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에게 더 나이가 많고 힘이 세며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어른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예방전략’은 아동성폭력은 아동이 아닌 성인의 책임이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책임이라고 본다. 아동성폭력의 책임은 지역사회 구성원, 기관, 조직, 사회구조 전체에 있으며, 지역사회는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할 책임을 가진다. 따라서 아동대상 성폭력예방교육은 지역사회가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여러 노력 중의 한 요소에 불과하며, 결국 아동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아동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통합적 예방전략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예방교육의 대상을 아동뿐 아니라 성인, 모든 사회구성원과 조직으로 확대한다³⁾.

3) 미국 성폭력자원센터(National Sexual Violence Resource Center, NSVRC)의 성폭력예방전략은 성폭력범죄는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 즉 위험요인을 증가시키거나 보호요인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가해자 개인의 행동은 신체적 폭력, 가족의 정서적 지지 수준과 같은 ‘관계적 요인(relationship factor)’, 그리고 교육 기회,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대응체계, 성별 불평등과 같은 ‘지역사회 요인(community factor)’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의 변화만을 통해 성폭력범죄가 예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Larry Cohen은 지역사회 기반의 ‘성폭력예방 스펙트럼(Spectrum of Sexual Prevention)’을 제시하였는데, 이 스펙트럼은 개인만이 아닌 환경의 변화를 강조하고, 사회체계와 사회규범의 변화까지를 포괄하며, 성폭력만이 아니라 교통안전이나 양육문제, 폭력예방 등의 영역에도 적용 가능하다.

2) 성폭력범죄예방 관련정책

일반적으로 범죄는 ‘가해자’, ‘피해자’, ‘범죄행위’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예방대책 역시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표 1〉

참고). 가해자 대상 예방정책은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피해자 대상 예방정책은 피해예방과 재피해예방으로 구분된다. 범죄행위 관련 예방정책은 지역사회안전망 관련 정책이나 CPTED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표 1〉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정책 및 제도의 유형

가해자 대상 예방정책		피해자 대상 예방정책		범죄행위 관련 예방정책
동기 감소 전략				기회 감소 전략
일반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예방교육 • 일반인 및 학생 • 아동관련직군 • 고위험군 	피해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예방교육 • 일반인 및 학생 • 고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안전망 확보(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아동안전지킴이 등)
특별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 강화 - 가해자 치료 - 신상공개 - 전자감시 - 거세 	재피해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수사·법률지원 - 주거지원 - 경제적 지원 - 가족지원 - 학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CPTED - 2세대 CPTED

또한 범죄예방 전략은 ‘동기 감소 전략(motive reduction strategy)’과 ‘기회 감소 전략(opportunity reduction strategy)’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동기 감소 전략은 가해자의 범죄 원인을 찾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반면 기회 감소 전략은 범죄행위에 대한 위험과 어려움을 높여 범죄기회(crime opportunity)를 줄임으로써 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이라고도 한다⁴⁾. 최근 도입되고 있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

	스펙트럼 단계	단계별 정의
1단계	개인의 지식과 대처기술 향상	개인의 폭력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증진
2단계	지역사회 예방교육 향상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폭력예방 및 안전과 관련된 정보와 자원을 제공
3단계	담당자 교육	사람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사회규범을 교육시키는 담당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
4단계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강화	관련집단과 개인의 힘을 합쳐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고 보다 많은 효과를 창출
5단계	기관활동 변화(조직적 실천)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는 사회규범을 형성하고 규제를 강화
6단계	관련 정책입안 및 법제화	건강한 지역사회 규범과 폭력없는 사회를 지원하는 관련법과 정책 입안

4) CPTED는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방어공간(defensible space), 안전한 도시(safer cities), 장소중심 범죄예방(place-specific prevention), 환경안전(environmental security), 자연적 범죄예방(natural crime prevention)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호중첩되는 연구영역이다.

터 구축, 다양한 지킴이 활동(아동안전지킴이 및 아동 안전지킴이집, 배움터지킴이 등),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등 지역사회협의체, 안전지도제작, 나홀로아동 보호대책(방과 후 돌봄교실, 방과 후 아카데미 등), 학교안전대책(안전강화학교, 아동안전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등), 유괴실종정보시스템구축,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서울시여행길 사업, 여성친화도시사업 등의 지역사회안전망 관련 제도들이 상황적 범죄예방의 예라 할 수 있다.

동기감소 전략에 기초한 범죄예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CPTED와 같은 기회감소 전략이 범죄의 근본적 원인을 무시하고 있으며, 범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문제로 치환하는데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반면 기회감소 전략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문제는 쉽게 개선되기 어렵고 가능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범죄예방은 한 가지 전략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 이유는 범죄는 복잡한 원인과 상황을 가지며, 실제 발생하는 범죄사건을 분석해보면 범죄동기와 기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Scott은 수백 개의 범죄예방 프로젝트들을 검토한 후 범죄예방정책과 제도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수준의 동기감소 전략과 기회감소 전략 양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⁵⁾.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유사한 정책적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오래전부터 서구 선진국에서는 가해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성폭력예방정책 및 제도를 시행해왔으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해예방 교육이나 가해자 재범억제정책과 같은 동기감소전략

이나, 능력중심예방전략에 근거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예방교육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 성폭력 범죄 예방의 방향은 기회감소전략을 포함하는 통합적 예방정책의 추진이며, 그 전략의 핵심은 ‘지역사회’ 단위의 ‘안전망 강화’이며, 추진동력을 ‘지역주민’의 참여와 책임감에 두고 있다. 이 같은 서구사회의 경험은 2000년대 이후 가해자 대상 예방정책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폭력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1) CPTED의 개념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미국과 영국 등 서구사회에서 가해자 엄벌이나 경찰활동을 통한 범죄예방의 한계에 봉착하자 지역사회의 공간구조와 관리방식의 변화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안전(safety)을 확보하고자 대두된 범죄예방전략이다. 간단히 말해 CPTED는 “건축 환경의 적절한 설계(design)와 효과적인 사용(use)으로 범죄 발생률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CPTED의 이론적 뿌리를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두고 있다. 범죄는 범죄자와 피해자, 취약한 공간구조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발생하므로 사회구성원이 거주 혹은 이용하는 물리적 환경의 설계와 관리방식을 변화시켜 범죄 유발요인(범죄기회)을 감소시키면

5) 강은영 외(201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방안(Ⅲ):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46

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변형시켜 범죄의 기회적 요인을 제거하게 되면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범죄의 실행이 어렵게 되고 거주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이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CPTED는 범죄예방은 물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서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도시의 물리적 환경과 범죄에 대한 관심은 Jane Jacobs의 1961년 저서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출발했으며, CPTED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Ray Jeffrey가 1971년에 쓴 저서의 제목에서였다. Jeffrey는 이 책에서 1964년부터 1968년 사이 미국 도시들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와 인종차별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후 1972년 Oscar Newman이 '방어 공간(defensible space)' 개념을 사용하면서 CPTED 연구는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⁶⁾.

Newman이 제시한 방어공간의 구성요소는 '목표물 강화(target hardening)', '접근통제(access control)', '감시(surveillance)', '영역성(territoriality)'이다. 이후 Moffat은 네 가지 구성요소에 '이미지 유지관리(image maintenance)'와 '활동 지원(activity support)'의 두 가지 요소를 추가하였다⁷⁾.

첫째, '목표물 강화'는 범죄에 대한 물리적 장벽을 설치, 강화하거나 혹은 범죄의 표적이 되는 대상물의

약점을 보강함으로써 범죄의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다⁸⁾. CCTV의 설치, 자물쇠, 잠금장치, 경보장치, 자동차의 핸들 잠금장치, 물리적 장애물 등 범행 대상에 도달하기 곤란하게 하거나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둘째, '접근통제'는 인증된 사용자들이 공간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공간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의 접근을 억제시키는 것을 말한다⁹⁾. 투시형 담장, 관목 식재, 일방통행로, 가로 of 폐쇄, 잠금장치의 설치, 출입차단 장치, 출입구 개수의 최소화, 인지가 용이하게 설치된 출입구, 막다른 골목 등이 그 예이다.

셋째, '감시'는 범죄예방의 유용한 수단이다. 범죄 예방적 물리적 설계는 지역주민의 비공식적 또는 자연적 감시 기회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잠재적 범죄자들은 자신의 범행이 노출될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면 범죄의 실행을 억제하게 된다. 감시 기회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사람을 배치하고, 침입자를 쉽게 관찰할 수 있게 하며,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외부인의 행동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신고가 용이해진다¹⁰⁾. 즉 CCTV 설치, 활동지원, 경비원의 배치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면 범죄자들의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¹¹⁾. 감시의 형태로는 창문을 통한 감시와 같은 '자연적/비공식적 감시(natural/informal surveillance)', 경비원이나 경찰순찰 등의 '공식적/조직적 감시(formal/organised surveil-

6) 강은영 외(201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방안(Ⅲ):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40

7) Moffat(1983),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A management perspectiv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25:4, p. 23; 박기범(2009),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2호, p.137; 강은영 외(201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방안(Ⅲ):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41-43 재인용

8) 김영재, 한상일(2009), 깨진 유리창이론에 대한 실증적 분석: 물리적 환경설계와 지역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46권 4호, p.234

9) 박기범(2009),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2호, p.137

10) 김영환(2008), CPTED 기법을 적용한 주거지역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집 제13권 제5호, p.275

11) 박현호(2007), 도시대체으로서의 CPTED, 도시정보 2007년 6월호(No. 303)

lance)', 그리고 CCTV나 가로등을 통한 '기계적 감시(mechanical surveillance)'가 있다.

넷째, '영역성'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담장, 표지판, 조경, 조명, 도로 경계석 등을 활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영역성은 '공적 공간(public space)', '반공적 공간(semi-public)', '반사적 공간(semi-private)', '사적 공간(private space)'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공간에 경계선을 표시하여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소유권과 이용형태를 정의함으로써 침입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게 되면 범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거주자들에게는 공간에 대한 소유의식을 강화시켜주어 범죄에 대항하고 범죄예방적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다섯째, '이미지 유지관리'는 시설물이나 공공장소가 처음 설계된 형태를 유지하고, 설계 목적에 부합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함으로써 사용자의 범죄나 일탈행위를 억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른 CPTED 원리가 잘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범죄예방에는 실패하게 된다¹²⁾.

여섯째, '활동지원'은 공공장소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거리의 눈(eyes on the street)'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하는 원리이다. 예를 들어 놀이터에 가족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든가, 공원에 주기적으로 공연이나 각종 행사를 유치하고, 운동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전략이 포함된다.

2) 2세대 CPTED: 물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통합

CPTED가 확산되면서 한편에서는 도시나 건축물 설계와 같은 물리적 변화나 CCTV 등의 기계적 감시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생겨났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CPTED에 실망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도시가 CPTED에 따라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CPTED를 도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전통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비용 효과적이며, 또한 범죄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발생하므로 단순히 물리적 요소의 변화만으로는 예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2세대 CPTED는 이러한 초기 1세대 CPTED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1998년 Saville과 Cleveland는 기존의 CPTED가 도시설계 등 물리적 요소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사회적, 문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1세대 CPTED 이론을 확장하여 '환경설계-범죄'에 '사회적 요소(social facts)'를 통합하는 것이었다¹³⁾. 제1세대 CPTED가 영역성과 방어공간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면 2세대 CPTED는 지역 사회 내에 긍정적인 행동방식 및 이웃공동체에 대한 기준이 공유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영역성이 확보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방어공간이 확보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은 이웃과 지역 내 공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심의 대상은 공공장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 내 모든 공간을 포괄하여야 한다. 결국 2세대 CPTED는 실제 범죄가 발생하는 각각의 지역사회 별로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에 기초하여 범죄동기를 감소

¹²⁾ 박기범(2009),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2호, p. 138

¹³⁾ Greg Saville, Gerry Cleveland(2008), Second-Generation CPTED: the Rise and Fall of opportunity Theory, p. 79-80

시키고자 한다. 구체적인 범죄예방 프로그램에서도 이전의 예방프로그램이 일률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구사한 반면, 2세대 CPTED는 개별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초한 범죄예방 전략을 실천하고자 한다.

Saville과 Cleveland은 1998년 저서에서 지역사회의 물리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연결시켜 범죄예방을 강화시킬 수 있는 5가지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¹⁴⁾.

첫째, ‘지역의 규모, 밀도, 거주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공간의 크기는 거주자들의 소외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지역주민간 유대가 형성되기 어렵다¹⁵⁾. 그러나 공간 크기나 밀도만이 영역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지역사회 문화 역시 중요하다¹⁶⁾.

둘째, ‘도시의 만남공간(urban meeting places)’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1세대 CPTED의 ‘활동지원’과 연관된 것이다. 범죄예방활동은 건축가나 도시계획 설계자가 아닌 공동체 구성원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만남의 공간은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지역주민간의 교류를 위해서는 공익적인 문화 행사나 스포츠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것도 유용하다.

셋째, ‘청년 모임(youth clubs)’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함께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임을 통해 할 일을 찾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생활기술을 배울 수 있다. 청년모임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의 관심과 후원, 훈련받은 직원 등이 필요하다.

넷째, ‘거주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참여개념은 1세대 CPTED의 ‘활동지원’ 개념과 연관되는 것으로 거주자 스스로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거주자의 책임감’이 중요하다. 지역사회 거주자들은 자신의 이웃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 물리적 설계의 변화는 방어가능한 공간을 창조하는데 일부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으며, 이보다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나 지역문제 해결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3) CPTED의 기여도와 한계

Crowe는 CPTED가 범죄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킨다는 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다고 밝혔다¹⁷⁾. 이를 종합하면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CPTED는 범죄를 발생시키는 환경변수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하에서 상호작용하는가를 분석하는 기회모델에 근거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회구조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기존의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들을 조정, 통합시킬 수 있다. 그 결과 지역사회 발전기금 등 추가적인 재정확보 역시 가능하다.

둘째, CPTED 전략은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가능하다. 주거단지는 물론 학교나 공공시설 등에 적용될 수 있고, 소규모 지역이나 특수공공시설에서도 활용

14) Greg Saville, Gerry Cleveland(1997), 2ND GENERATION CPTED: An Antidote to the Social Y2K Virus of Urban Design

15) 예를 들어 일본 동경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나 범죄율은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이나 개인적 존중감, 강한 책임감에 있다.

16) 예를 들어 일본 동경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나 범죄율은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일본의 문화적 특성이나 개인적 존중감, 강한 책임감에 있다.

17) Crowe(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2nd eds. Boston: Butterworth-Heinemann; 신의기 외(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71-74 재인용

가능하다. 또한 CPTED 프로그램은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 강화와 관련된 근접목표를 장·단기적으로 상세히 기술하는 평가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신축 혹은 개축되는 시설물에 대한 범죄안전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CPTED 전략은 법집행기관에만 의존하지 않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공공분야, 사회경제분야, 경찰행정분야 등과 여러 부처 간 협업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지역주민과 기관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주민역량 및 사회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조건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공동체사회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CPTED 전략은 명확한 한계점 역시 가지고 있다.

첫째, CPTED는 범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즉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합리적이며 범죄를 행할 때 따르는 위험(risk)이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한다. 그러나 범죄자 중 일부는 합리적 선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이코패시 등 인격장애자의 경우에는 CPTED 전략이 무력할 수 있다.

둘째, CPTED 전략의 실현은 정책의 성격상 많은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구한다. 따라서 지자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 등 지역환경과 관련된 기관들간의 부처이기주의나 지역이기주의는 CPTED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CPTED의 가장 큰 한계점은 CPTED 전략이 사적 공간에서, 아는 사이에 발생하는 범죄, 즉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 혹은 옥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등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 들어 국가정책과 대중매체의 보도관행은 여전히 여성폭력범죄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공적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에 의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부부간, 데이트강간 등에 대한 국가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고, 2000년 이후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많은 부분이 아동성폭력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도 친족성폭력 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터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2010년을 전후하여 추진되고 있는 여성폭력 관련정책에서는 이같은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CPTED의 적용(서울시 여행길 사업, 과천시 신도시 건설, 서울시 저소득층 지역사업 등),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 각종 안전지킴이 운영 등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매년 엄청난 예산을 집중하고 있으며, 여성폭력문제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 역시 등하교길 안전지도사업, 아동안전학교사업,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 등을 통해 가정 밖에서 발생하는 여성·아동 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CCTV 설치와 같은 CPTED 전략은 출발점 자체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4. 성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제언

첫째, 가해자 엄벌주의만으로 성폭력범죄는 예방될 수 없다. 성폭력범죄는 암수범죄가 많은 범죄이므로 처벌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의 엄격성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억제효과가 없다.

따라서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고, 성폭력범죄 수사력의 향상을 통해 기소율과 유죄입증률을 높여, 유죄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형성되어야만 가해자 엄벌정책 역시 실효성을 거둘 것이다. 둘째, 향후 여성폭력담론은 사회적 인식을 ‘생물학적·심리적 결정론’에서 ‘사회문화·구조적 시각’으로의 전환시키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¹⁸⁾. 1990년대 우리 사회는 여성폭력 문제를 사회구조적 시각에서 쟁점화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여성폭력을 규제하는 법제도를 탄생시킨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강간 및 강간살인 사건 특히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에 대해 싸이코패시(Psychopathy), 소아기호증, 심리성적이상 등 그 원인을 가해자 개인의 병리적 특성, 즉 심리적, 혹은 생물학적 이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으며, 그 결과 화학적 거세와 같은 성폭력범죄자 재범예방대책의 도입 역시 가능했다. 이러한 생물학적, 심리적 결정론적 시각은 성폭력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원인들을 간과하게 만들어 우리 사회,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폭력과 범죄로부터의 안전’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sustainable) 지역공동체’는 21세기 국가 사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며, 성폭력 예방활동의 주체 역시 지역사회가 되어야 한다. 성폭력은 지역사회, 다시 말해 지역사회 구성원, 기관, 조직, 사회구조 전체의 책임이며 따라서 지역사회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할 책임을 가진다.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의 안전은 지역사회의 안전수준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정기적으로 진단, 조사하는데서 출발한다. 지역 내 ① 범죄위험공간, ② 범죄피해 취약집단, ③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④ 지역주민의 두려움 수준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CPTED의 안전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지역사회 내 사회적·물리적 무질서 관리가 필요하다. ‘사회적 무질서’와 ‘물리적 무질서’의 증가는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이웃공동체를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범죄를 증가시킨다(‘깨진 유리창이론’). 우선 지역사회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지역주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며, 자신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구하러 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들이 방어할 책임을 느끼는 공간의 범위가 협소해진다. 지역주민들이 인식하는 영역성이 자신의 집과 가족에만 한정된다면(‘영역성 약화’)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 내 사건에 대해 무관심해지고(‘감시 약화’), 아동은 쉽게 외부 침입자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무질서(공공장소 주취, 싸움, 길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 마약 사용, 이웃 소란, 구걸행위, 성희롱, 거리 매춘 등)와 물리적 무질서(낙서, 공폐가, 버려진 건물, 쓰레기 무단투기, 공공기물 손괴, 리터링, 유기견 문제 등)를 완화, 극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단위의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18) 예를 들어 아동성폭력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성차별이나 가부장적 문화, 모성보호, 성기중심적 성문화 이외에도 음주문화, 아동의 사회적 지위, 아동포르노그래피 규제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여섯째, 안전한 지역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해자나 피해자 중심 범죄예방 전략 이외에도 지역사회 내 ‘물리적 공간’의 건축과 관리에 범죄예방적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CPTED는 범죄의 실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거주자에게는 자신이 생활하는 환경이 더욱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으로,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변형시켜 범죄의 기회적 요인을 제거하고 향후 유지 및 관리하는 방법까지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CCTV와 통합관제센터 설치사업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서울시의 여행길사업과 마포구 염리동 주거지 개선사업, 과천시 신도시 사업,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사업 등으로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CPTED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일곱째, 지역주민의 책임감과 참여 없이는 지역사회 안전은 확보될 수 없다. 범죄는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CCTV나 물리적 요소의 변화만으로는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고, 중앙정부나 경찰의 방법활동만으로도 부족하며, 지역주민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안전은 ‘거주자의 책임감’과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안전은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측면의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의 유대, 응집력, 의사소통, 집합효율성, 비공식적 사회통제 등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이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은 이웃과 지역 내 공간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심의 대상은 공공장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일하고 놀고 생활하는 지역 내 모든 공간을 포괄하여야 한다. 즉 향후 성폭력 범죄 예방대책의 궁극적 지향점은 ‘지역사회’ 단위의, 자기 자신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지역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지역자치모임 활성화, 자치 방법활동 확대, 아동보호 자원봉사활동 등).

여덟째, 범죄피해 고위험군 아동과 여성에 대한 차별화된 보호전략이 필요하다. 홀로 남은 아동, 부녀 가정, 조손가정, 여성 1인 가정, 다문화가족, 빈곤 가정 등 범죄피해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범죄예방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지역아동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CYs-Net, 교육청 및 학교, 여성폭력관련 민간기관 등의 협력체계를 통해 종합적인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지역사회안전은 ‘객관적 안전’과 ‘주관적 안전’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안전(지역 내 범죄발생율) 확보만이 아니라 주관적 안전(위험) 즉, 지역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두려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지역공동체 차원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범죄두려움은 실제 발생하는 범죄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범죄두려움 수준은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행위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참 고 문 헌

- 강은영 외(2010).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방안(Ⅲ): 학교 및 학교주변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영제, 한상일(2009). 깨진 유리창이론에 대한 실증적 분석: 물리적 환경설계와 지역범죄통제 거버넌스의 효과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제 46권 4호.
- 김영환(2008). CPTED 기법을 적용한 주거지역의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집 제13권 제5호.
- 박기범(2009).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CPTED의 효과성 고찰.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2호.
- 박현호(2007). 도시대책으로서의 CPTED. 도시정보 2007년 6월호(No. 303).
- 신의기 외(2008).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원숙(1998). 성폭력과 사회복지. 강남대학교출판부.
- 이현혜, 강은영, 이현숙, 하지영 (201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천 매뉴얼 개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Crowe(2000).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pplications of Architectural Design and Space Management Concepts, 2nd eds. Boston: Butterworth-Heinemann.
- Greg Saville, Gerry Cleveland(1997). 2ND GENERATION CPTED: An Antidote to the Social Y2K Virus of Urban Design.
- Greg Saville, Gerry Cleveland(2008). Second-Generation CPTED: the Rise and Fall of opportunity Theory.
- Moffatt(1983).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A management perspectiv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vol. 25.

성폭력 피해자 권리 관점에서 본 성폭력 방지 대책¹⁾

이 미 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1. 시작하며

지난 20여 년 동안 반(反)성폭력 법·정책의 개선으로 우리나라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권리는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10% 미만으로 추산되는 성폭력 신고율(여성가족부, 2010)은 광범위한 실제 피해규모와 현행법의 낮은 실효성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의 이면에는 주변의 이해와 지지를 받기보다는 ‘혹시 유발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과 비난의 사회적 통념에 맞서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현실이 있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과거 성력 등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원치 않는 합의강요로 인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는 기존의 법 규정, 이행과정,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피해자들의 대응방식과 지원체계 시스템 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고, 제대로 권리보장을 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2000년들어 여성운동단체에서는 성폭력 피해자(victim)라는 용어가 갖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 대한 전환을 위해 피해자를 생존자(survivor)로 바꿔 부르자는 논의가 일어났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수동성, 약함, 취약성을 내포하며 여성의 끈질긴 저항과 힘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유엔, 2008[2006]: 24). 수많은 생존자들은 피해로 인해 고통과 절망, 분노 등을 겪지만 그 내면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과 용기, 지혜를 갖고 있다. 나아가 생

¹⁾ 이 글은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문 제5장을 기반으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

존자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말조차 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각자 다양한 대응을 하고 있는 변화의 주체이며, 피해생존자로서 수사·재판·진료·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운동차원서의 용어선택이기도 하다²⁾.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를 생존자로 명명(naming)하는 것은 기존의 ‘피해자’라는 용어가 가졌던 의미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이다. 같은 맥락에서 형사사법절차에서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생존자들의 존재와 경험이 모습을 드러낼 때,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갈 때, ‘법적 합리성’도 자연스럽게 변화해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반성폭력 법 정책을 돌아보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실제적인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변화되어야 할 성폭력 피해자를 보는 관점 및 법적 지위

가. 배려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피해자 지위 확보

성폭력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서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로서 2차적인 지위에 있다. 근대 형사법 체계가 확립되어가면서 범죄에 대해 사적인 보복과 징벌이 엄격히 금지되고, 국가가 독점적으로 형사소추 권한을 갖게 된 이후 피해자는 보이지 않고 소외된 존재였다. 국가형벌권이 강화되면서 주된 관심은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침해 유무에 집중되었고(이재상·이호중, 1992), 피해자는 어떻게 피해를 경험했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또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등 피해자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단지 고소인, 참고인, 증인의 위치에서 실제진실 발견을 위한 절차의 객체이자 증거방법으로 치부되어온 것이다. 즉, 피해자는 증거의 대상이거나 재판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전수영, 2009: 27) 존재이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피해자는 통상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률 명칭에서도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강조, 연구자) 등 피해자 권리를 다루는 법과 규정의 제목들이 하나 같이 ‘피해자 보호’로 표기되어 있다.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주요한 권리의 한 부분이지만, 피해자의 포괄적이고 주체적인 위치 및 입장을 담기에는 매우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의 행사라기보다는 시혜적인 배려의 의미가 담긴 말이라는 점에서, 범죄피해자로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는 다양한 권리를 의미하지 못한다. 특히 어린이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온 국민이 공분하며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이나 피해자 권리보장 방안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이호중(2008: 68-69)은 피해자 권리규정에 피해자의 권한강화 내지 피해자의 주체화라는 방향성이 명확하게

2) 한편, 생존자라는 용어가 통상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사고로부터 살아난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성폭력 피해자에게 사용하는데 다소 생경함이 있고, 또한 성폭력 피해로 인해 죽음에 이른 경우는 생존자로 불릴 수 없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리고 ‘생존자’는 여성이 경험한 폭력으로부터의 피해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유엔, 2008[2006]: 24). 또한 생존자의 정체성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전히 피해의 경험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낙인화된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너무 억압적이라는 지적도 있다(Drauckert, 1992; Herman, 2007; Grossman, Cook, Kepke, & Koenen, 1999; 김지혜, 2011: 134에서 재인용).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나 생존자가 아닌 ‘경험자’로 개념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변혜정, 2004; 김지혜, 2011).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형사사법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의무’라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법적인 피해자 권리규정들이 피해자에게는 신청의 권리만 주어졌을 뿐, 실제적 허가 권한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지니는 신청권이라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은 전적으로 허가의 권한을 지닌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로서 피해자 지위확보가 요구된다.

나. ‘피해자화’의 탈피와 피해의 맥락에 대한 새로운 이해

우리사회는 성폭력 피해자를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고정시키고 있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03). 이는 피해자를 자신의 경험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누군가 그 피해의 경험을 대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피해자화의 정치’이다. 피해자화는 전형적인 피해자상을 벗어난 피해자들을 ‘진짜 피해자’로 보지 않고 화간을 의심하고, 꽃뱀으로 모는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즉,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 이후 자아존중감의 회복과 피해 극복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현실은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획일화된 피해자 상(像)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와 고통을 언어화하여 이야기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사법기관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분노하며 문제제기를 하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피해자이다.

또한 피해의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피해자

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70%는 아는 사람이고, 가족이나 친밀하고 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은 실제 상담통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판단기준에서 요구하는 최협의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가, 피해자는 어떻게 얼마나 저항 했는가 등의 입증요구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우발적으로 입은 피해만을 상정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평소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사건의 발생양태와 이후 반응이 다르다는 점이 강간의 판단기준으로 고려되어야 한다³⁾.

3. 피해자 권리 실현을 위한 제도의 개선

가. 친고죄 폐지

대부분의 성폭력이 친고죄 규정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소추권이 철회될 수 있는 범죄로 분류되어 있어, 피의자(피고인)들이 합의를 하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협박까지 하고 있다. 친고죄 폐지는 1993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시에도 여성단체에서 강력한 주장을 했었다. 그럼에도 남성 위주의 법조인이나 정치인들이 주로 피해자가 여성인 성폭력에 대해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해야한다’며 친고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UN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2007년, 2011년 연속해서 우리나라에 친고죄 폐지를 권고했다.

실제 우리사회에서도 성폭력의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 연령 및 범죄 유형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

3) 예를 들어 같은 노조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통상적으로 조직보위원 속에서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한다. 동시에 ‘자본이나 정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불동지인데’라는 통념으로 인해 사건들이 가려지거나 묻혀 지는 가해자 중심, 혹은 가해자를 둘러싼 직원들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이를 피해자의 경험과 감정,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계속 불동지이기 때문에’ 더 분명히 처리하고 가야할 일이 되는 것이다(조지영, 2011: 111).

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시 특수강도강간 등, 13세 미만과 장애인 성폭력, 친족성폭력 등에 한해서만 비친고죄였다. 1998년 신설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비친고죄이다. 2006년에는 피구금자 추행죄와 장애인보호시설종사자의 간음, 추행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하였다. 같은 해에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은 친고죄 형태에서 고소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가, 2008년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을 바꾸었다. 이어서 2010년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3가지의 반의사불벌죄⁴⁾ 항목만 제외하고 친고죄가 전면 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친고죄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정치권과 정부에서 자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친고죄의 변화과정을 보면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지향점을 찾아가기보다는 사회적인 충격과 공분을 일으키는 성폭력 사건의 발생 후에 여론 무마성 법개정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친고죄 관련 법 규정은 일선의 수사담당자들마저 고소기간을 숙지하지 못해 벌어지는 2차 피해도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현행 친고죄에 속한 성폭력의 경우,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고소를 취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고소취하권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이지만, 오히려 피해자들은 온갖 협박과 회유 속에서 합의를 요구받는 등 많은 2차 피해를 겪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⁵⁾. 다행히 이번 19대 국회에서 여·야 한목소리로 친고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나. 성폭력특별법 체계에서 형법으로의 일원화 및 세부규정 마련

1) 형법 개정

성폭력을 규정하는 법이 특별법으로 존재할 것인지, 기본법인 형법에 편입되어야 할 것인지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주요 논란거리였다. 1993년에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법사위 위원들이 성폭력특별법 형태에 반대했다. 반대의 논거는 첫째, 성범죄는 보편적인 사회현상이므로 이에 대한 형사정책은 일시적인 규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둘째, 특별법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는 없으며, 셋째, 제출된 특별법안은 서로 상이한 형사정책과 사회정책이 하나의 법률안에 그것도 서로 모순되게 규정되어 있으며, 넷째, 성폭력 개념의 모호성·법익 체계의 복잡성·실체법과 절차법의 혼란으로 인한 모순 등이었다(이상덕, 1997: 60-61).

그러나 당시 성폭력을 규정한 형법 제32장의 제목도 “정조에 관한 죄”였던 상태에서 형법에 여성단체의 요구를 담아내기란 거의 불가능했고, 입법자나 법조인 누구도 이를 형법으로 반영하겠다는 제안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폭력특별법제정특별위원회를 꾸려 활동했던 여성단체로서는 특별법의 형태라도 성폭력에 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가해자 처벌만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 관련한 조항을 함께 규정하기에는 특별법이 적절한 형태이기도 했다.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고 수차례 개정을 거쳤으나

4)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고 있다.

5) 한편,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할 수 있는 기소독점주의이지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한해 피해자가 소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인의 의사표시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정도희, 2009: 103). 그러나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성폭력을 사적인 문제로 남겨두거나 합의강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본법인 형법의 성폭력 규정을 모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협의의 폭행·협박 개념의 문제, 강간과 추행행위의 이분법, 친고죄 등의 문제는 성폭력 범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과 관련 되어 있어 인식론적·실천적 과제였지만 법률체계상 성폭력특별법 개정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 형법개정의 필요성이다(이호중, 2007: 4-5). 또한 성폭력특별법 제정 당시 반대논리로 제기되었던 위의 몇 가지 우려들이 실제 문제로 드러난 부분도 형법개정으로 가야하는 근거가 되었다.

여성인권법연대⁶⁾에서는 형법개정안⁷⁾의 기본방향을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로 정하고 법안을 준비해 임종인의원의 발의로 17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2년여 동안의 지난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통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한 개정안이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당시 국회나 정부, 사회가 갖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 이후에는 형법 개정 관련 논의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당시 개정안에서 담았던 친고죄 폐지와 아내강간 처벌, 그리고 비동의간음죄 신설 등의 내용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도 충분히 유용하게 변화를 주도해갈 수 있는 부분이다.

2) 피해자 진술의 선택권

비공개재판청구권의 범주가 증인신문 시에만 한정

된 것도 실제적 피해자 권리보장에 걸림돌이 된다. 왜냐하면 공개재판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증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신문 등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권의 범주를 폭넓게 늘릴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피해자 측의 신청이나 재판장의 판단에 의해 비공개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판사는 비공개재판을, 피해자는 공개재판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피해자로서 공개재판에서 제기하거나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피해자 진술권이 비공개재판의 보호막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자율적 인격주체로 대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 비공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도 필요하다(이호중, 2006-b: 76). 피해자가 공개재판이나 비공개재판이냐의 선택지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성폭력 피해자는 비공개재판을 원할 것이라는 예견도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 시에도 피해자의 사용여부 선택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보호가 되면서 법관이나 배심원들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차단막 설치에 의한 진술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여성인권법연대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성·인권위원회가 해소되면서 2005년에 결성된 회의체로, 서울여성의전화,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등의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이에 뜻을 함께하는 이호중 교수 등 학자,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반적인 여성인권법의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었다.

7) 개정안에는 강간의 개념을 확장해 남성성기가 여성 성기에 삽입 되는 것 외에 구강성교라도 항문성교 등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강간죄의 객체를 사람으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성폭력특별법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유사강간형태의 범죄들인 구강성교나 항문성교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까지 강간에 준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고, 피해자를 부녀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람'으로 넓히고 있다. 그리고 정의(개정안 306조의 2) 규정에 '사람'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내강간을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동의 없는 성적 행동'과 '성적 행동의 강요'라는 새로운 용어로 강제추행을 구분하고 있다. 이 개념은 그동안 여성인권법연대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 기존의 강제추행에서 제외되고 있는 수많은 형태의 성폭력을 포괄할 수 있는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오히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왔던 친고죄를 전면 폐지하였다.

3) 정보권 보장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사 전에 피해자의 형사법절차상 권리, 각종 지원가능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교부하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했다는 사실을 진술조서 맨 앞에 기록하도록 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서면 항목에 피해자가 가명수사를 원하는지, 원래 주소지나 전화번호가 아닌 곳으로 연락해줄 것을 신청했는지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또한 가해자를 조사할 때에도 가해자 권리의 고지 외에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협박 등의 행위 시 처벌되거나 양형에 불이익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및 그 주변인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합의를 원하는 경우 담당경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타진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일으키면 확실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을 고지하고, 실제 양형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처벌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⁸⁾.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제한의 필요성은 재판 확정 기록이나 소송종인 기록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에도 현 규정은 검찰에서 보관하는 재판확정기록은 검사에 의해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59조의 2 제2항). 그러나 법원에 보관하는 소송 계속 중인 기록에 대해서는 제한의 근거기준을 두지 않고 있다. 실제 피고인이 양형상 이익을 얻기 위해 합의나 공탁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고자 기록의 열람·등사를 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소송계속 중인 기록에 대한 관리는 더 엄격해져야 할 것이다(오승이, 2011: 183).

최근에 법원이 성폭력전담재판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록열람 등 법원에 의한 2차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고려하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4) 피해자 인격권과 신변보호권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피의자/피고인 및 그 가족, 주변인에 의한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주변인에 대한 무차별적 접근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폭력특례법 제21조에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7조,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을 준용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와 같이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에 해를 입는 것이 이 규정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이다. 공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아 아직 증인의 지위에 있지 않은 피해자에게 인정될 지가 논란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피해자의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필요한 조치에 피의자/피고인이 피해자 측 가족과 주변인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생활공간에 나타나서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는지도 의문이다.

성폭력특례법(제22조)에서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제1항과 관련하여 그 주체

8) 즉, (1) 피해자에 대한 서면을 통한 피해자 권리고지, (2) 피해자와의 연락방식, 가해자 접근 제한 조치 신청권, 가명수사신청권 등에 대한 조사의무 부과, (3) 가해자에 대하여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경고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것, (4) 법원 예규, 규칙 등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 규정을 대폭 확충하여 입법화하는 방안 등 관련 내용을 연결시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라고 해서 가해자 및 가해자 측 가족, 주변인도 포함될 여지는 있으나, 그 금지되는 행위 형태가 출판물·방송매체·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에 한정된다. 청소년성보호법(제28조의 2)에서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 등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하는 조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청구 주체가 검사로 한정되어 있다. 그 제도의 취지도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해의 배제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것이 수사·재판과정에서 가해자 측의 접근에 의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한계이고, 법원을 통한 정식 보호처분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는 면에서 수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처분으로 활용이 가능할 지도 남겨진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에게 공식적인 고지를 하는 것이다. 가해자를 처음 소환하여 조사를 할 때,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피해자의 가족·주변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우 양형 상 불이익을 가질 수 있고,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피고인 자신이 아닌 그 부모·기타 가족·친인척·기타 주변인에 의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양형에 불이익하게 작용될 수 있고,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피해자 조사가 개시될 때 피해자의 권리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면서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가치는 가해자의 방어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다. 가해자의 방어권은 수사절차상 가해자가 가지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형사법 담당자의 인식전환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정교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친고죄의 폐지는 이러한 2차 피해를 줄이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한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피고인을 방어한다는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의 경우 성폭력 통념에 기반하여 피해자를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게 된다. 변호사는 보통 피고인의 대리인 지위를 갖게 되지만 변호사법(제1조)과 변호사 윤리규칙(제1조)에 의하면 피고인을 대리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공익적 책무를 가지며 특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하는 것은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규칙(제74조)은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중복신문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소송규칙(제74조)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위반에 대한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고 단지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근거하여 신문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인데 실무상 그 경계가 모호하여 특별한 제지가 이루어

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의 변호사 윤리규정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데,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한다. 지침의 마련과 징계는 변호사협회 스스로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5) 피해보상권 보장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이 기금이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부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시행으로 인해 연간 600억의 피해자 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기존에 일반예산으로 책정되었던 항목이 기금으로 들어오면서 실제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실제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실제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주 대상으로 한 보상기준에는 일반 성폭력 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과, 근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도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의해 실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한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별적인 합의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의 개념은 피해자의 권리 중 하나가 아니라, 돈 받고 소를 취하하는 조건이 되면서 그 의미가 쉽게 변질되거나 뒤흔기기도 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 배분과 활용 면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범죄 피해 배상을 형사절차에서 진

행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고, 사실상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시정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범죄피해의 배상 청구가 형사소송에 통합되어 이루어지며 범죄자가 배상을 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범죄피해자기금에서 보상하고 나머지는 범죄자로부터 구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6) 조력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변호인선임권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피해자는 범죄의 기소권을 갖는 검사가 변호인의 역할까지 해주길 기대하지만,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성’이라는 명목으로 법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는 누구의 조력도 없이 ‘나 홀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동석이 허가된 신뢰관계인은 어떠한 조언이나 참여도 허가되지 않음으로, 심리적 위안 이외의 실제적 도움은 기대할 수 없다. 반면에 피의자/피고인은 변호인 선임권이 있어 사건과 관련한 각종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 법원이 행하는 증인심문과 감정에 참여하여 변호를 하고, 의견의 진술, 고소인이나 증인의 공격 및 피고인 방어 등 변론을 하며, 피의자/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한다. 정작 피해자는 단순한 고소 대리인으로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을 뿐 실제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해자로서 가해자의 석방, 양형 또는 가석방을 심리하는 공개재판절차에서 피해자가 적절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⁹⁾.

따라서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주체적인 지위

9)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석방, 양형 또는 가석방을 심리하는 공개재판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류병관, 2011: 47).

를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변호인 제도는 피해자 개인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실체진실의 발견에도 기여하며 절차의 지연을 방지할 수도 있다(정도희, 2011). 최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 기본계획(2007-2011)」에서도 이미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원칙적으로 변호인 제도의 도입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피해자 지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기반위에서 가능한 것이며, 제도 도입 시 피해자권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1997년에 도입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는 구체적으로 동석자의 범위나 역할 등이 명시되지 않아 담당자에 따라 동석여부가 결정되는 등 모호하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동석의 대상 및 역할이 공식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 동석여부는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지만, 만약 수사관이나 재판부에서 동석을 거부한다면, 거부 사유를 보다 세분화하여 규정하거나 거부 시 서면으로 이유를 제시하도록 한다든지, 또는 담당자의 재량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노력

실제 상담현장에서 보면, 피해자가 어떤 경찰과 검사, 판사를 만났느냐에 따라 형사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그 결과가 매우 달라진다. 따라서 이들 전담자의 인권감수성¹⁰⁾을 키우고, 성폭력 수사 실무에 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확보해 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실, 이러한 교육은 성폭력 전담자만이 아니라, 이들의 업무 방향을 조언하고 결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선임자들도 함께 받아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 전담수사관과 전담 재판부 교육은 연간 1~2회의 단시간 연수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형식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 DB를 구축하거나 정기 세미나를 운영하는 등 실제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권감수성을 쌓아갈 수 있는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 또한 시급하다. 2006년 도입된 성폭력전담 검사, 전담 사법경찰관제에 이어, 2008년에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성폭력피해 피해자들은 첫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성폭력전담자에 의한 사건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실제로 이들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구조인가를 살펴보면, ‘성폭력전담자’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단지 2년 이하 동안에만 전담자로 존재할 뿐이다. 사실 성폭력피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사의 노하우를 갖기에 1~2년은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더욱이 아동이나 장애인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고도의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한데 현행 구조에서 이러한 전문성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뿐만 아니라 수사와 공판검사가 다르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판검사가 바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¹⁰⁾ 성폭력피해 피해자들이 경찰이나 검사를 신뢰하는 데는 “이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내도 되겠느냐?, 전화는 어떤 번호로 소통을 하는 것이 편리하겠느냐?” 등의 섬세한 배려가 있는 질문에서 시작될 수 있다.

실질적인 전담수사관제의 확립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 및 예산이 기본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성폭력 사건의 전문수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1~2년 간격의 순환보직이 아닌, 10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한 연구와 실무를 하며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¹¹⁾.

이 문제는 검·경의 인사시스템이 현행 순환보직제를 택하고 있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결단이 필요한 과제이다. 제일 이상적인 것은 전문성 있는 성폭력전담자가 될 수 있도록 10년 이상씩 한 분야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차선택으로 각 검찰청마다 성폭력 전담 검찰수사관을 배치해 그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이들이 새로 부임하는 전담검사와 팀을 이뤄 성폭력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이러한 내용의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하는데 특히 검찰수사관들 사이에서도 성폭력 사건은 어려운 사건에 해당하여 이것만 전담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침마련과 함께 인센티브 등 현실적인 보완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사실은 상당 부분 형사사법절차 담당자의 성 고정관념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법·제도적 차원을 넘어 문화의 문제이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 못지않게 성 인식과 인권감수성의 변화가 중요하며, 이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예방과 직결된다. 따라서 사회 변화의 한 흐름인 양성평등 주류화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는 성인지적 감수성과 지식을 지닌 형사법

절차 담당자의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현직 수사·공판 법조인과 담당자뿐만 아니라, 관련 교육기관에서의 법여성학 개론의 필수화와 다양한 법여성학 과목의 전공화, 법여성학과 기존 법학 과목간의 내용적 통합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 관련부처 및 NGO와의 협조체계 구축

현행 피해자 권리 관련 제도의 이행과정을 보면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 산발적으로 업무가 나뉘어있거나 중복되어 진행되고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일례로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폭력 피해아동과 장애인의 진술조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과의 관계도 부처 간의 조정이 요구된다. 최근 여성가족부에서는 일정 훈련을 거친 전문인력을 아동 성폭력 피해 신고가 많은 여성·학교 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우선 배치, 피해자 진술조사 과정에 참여시키고 있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한 ‘성폭력 피해아동(장애인)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전문가의 심층면접을 통과한 인력들로써,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진술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의 피해자 진술조사 과정에 참여하여 피해자 진술조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진술조사¹²⁾ 전문인력 제도 역시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고, 실제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또 하나의 보호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원에서 이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등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신

11) 성폭력 전담여성수사관제도 보다는 담당자의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기반으로 한 수사 방식의 전문성 확보가 더 중요하다(이미경·이경환, 2008).

12) 여성가족부, 2011. 4. 25. 보도자료 참조

뢰관계인·진술조사 전문인력·법률조력인을 만나게 된다. 문제는 이들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가 아직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누가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피해자가 갖는 권리를 고지할 것인가를 비롯해, 누가 형사사법절차상의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세 지원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서 피해자가 이들 조력인을 대면하여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어디로 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고소와 동시에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받아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고지 받은 후 실제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법률조력인 제도와 가장 유사한 제도로 보이는 여성가족부의 무료법률지원제도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성폭력위기센터에 위탁해 무료법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사 본안, 민사 집행, 형사 고소, 형사 본안, 가사사건 등에서 피해자를 대리하거나 조력하는 등 일체의 법률구조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여성가족부의 법률구조사업과 법무부의 법률조력인 제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현행 구조라면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성인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비슷한 사업을 두 부처에서 각기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인적·물적 효율성의 문제도 대두된다. 따라

서 각 부처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의 구축이 우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시작하고 이슈를 제기한 것은 정부가 아닌 여성운동단체들이었다. 이는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정부는 NGO와 건강한 파트너십을 형성해가는 것이 아니라, 단체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지도·감독’을 하려고 한다. 제도화로 인해 일부 상담소들은 정부로부터 연간 약 6,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받는데,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지도·감독’이라는 행정적 용어를 사용하며 엄격하게 관리한다¹³⁾. 그리고 상담통계나 회계정보, 의료비를 지원받는 피해자들과 보호시설 입소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정부와 피해자의 개인정보권의 침해를 우려하는 단체들의 대립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이제 상담소나 쉼터의 운영을 정부에 맡기고 활동가 및 운동단체는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비판·제언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이항 대립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제도화는 그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이뤄낸 성과이므로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제도화는 믿을 만한 자원이며, 운동의 성과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신상숙, 2007)라는 주장이 있다. 이처럼 제도화의 두 얼굴¹⁴⁾에서 정부와 민간이 어떻게 상호 협력해갈 지는 지난한 토론과 성찰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1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기별로 구청 직원이 상담소를 방문해 업무일지를 비롯한 재정 서류를 확인하며 감사하고 지적한다. 심지어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성폭력 피해자 쉼터에 들어온 인원이 몇 명인지 직접 보고 확인하겠다고면서 주민등록증과 입소자 얼굴을 대조하기를 원하기도 한다. 단체 활동가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 기준을 요구하거나, 출근부 도장을 찍는 문제도화 논의는 김현정, 2000: Jung, 2002: 서미라, 2002: 김보연, 2006: 신상숙, 2007 참조.

14) 제에 이르기까지 개입하려한다. 뿐만 아니라 단체의 외부 교육활동이나 대정부 시위활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산지원과 관련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4. 일상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의 확산

가. 피해자들의 다양한 대처와 역량강화(empowerment)

모든 반성폭력운동, 법과 제도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사회통념에 맞선 피해자들의 특별한 용기와 분투(struggling)가 기반이 되었다. 피해자가 죽거나 가해자를 죽이는 극단적인 형태의 말하기¹⁵⁾부터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친구나 가족·직장·상담기관에 피해사실을 드러내 부당한 피해에 대한 분노와 이로 인한 고통의 심각성을 알려낸 수많은 피해자들의 말하기가 있었다. 여성단체에서 주최하는 성폭력 피해자 말하기대회(speaking out day)¹⁶⁾는 피해자들이 대중들 앞에서 피해의 고통과 극복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세상을 향해 소리를 내며 치유와 운동의 장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고, 성폭력 피해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재인식하며 새롭게 세상과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리고 호신술 등 자기방어 훈련도 중요한 역량강화의 하나이다.

최근 법적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혹은 형사나 민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특별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금을 받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피해자

들이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조모임결성이나 지지집단의 네트워킹, 지역사회 폭력지킴이활동, 학교폭력지킴이활동 등 자신의 문제를 주제로 한 활동에 조력을 하거나 당사자 활동을 하기도 한다.

여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NGO에서는 피해자들을 전화나 면접, 온라인상으로 상담한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주로 심리적 지원과 법적·의료적 지원, 쉼터지원 등을 한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상담을 넘어서 피해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다. 무엇보다 내담자들이 현재 상황에 적응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역량강화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그 부당성을 인식하고 문제 제기하여 시정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나. 피해자 지원단체의 다양한 성문화 운동의 전개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바뀌가는 일은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차원의 접근이다. 피해자 상담·지원을 하는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학교나 직장에서 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주요사건의 판결이 내려지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한 퍼포먼스, 온라인 토론 및 캠페인을 하기도 한다. 요즘은 블로거 뉴스나 트위터 등을 이용해 네티즌과 소통하는 전략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널리 열리고 있는 안전한 밤길 되

15) 13년간 의붓딸을 강간해온 아버지를 살해한 김○○·김△△사건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하는 극단적 형태의 '말하기'와 동시에 피해자의 자살도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1991년 8월에는 "집단성폭행 피해 여성생이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동아일보), 9월에는 "딸 마중나간 어머니 성폭행당한 뒤 피살"(중앙일보), 10월에는 "성폭행 주부 비판자살"(한겨레, 10. 6) 등 성폭력 피해로 자살한 피해자들이 보도되었다. 이들이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때문이었다. 그들이 남긴 유서들에 성폭력 피해자에게 쏟아진 사회적 비난으로 인한 고통이 묻어나 있었다. 문제는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자살이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뉴스가 아닐 정도로 지속되는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가해자를 죽이거나 스스로 죽음을 택한 피해자들의 '말하기(speak out)'는 잘못된 성폭력 통념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좌절이자 절규, 그리고 저항이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와 같은 극단적 형태를 벗어나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말하기'가 여성인권운동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변화가 있다.

16) 2003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현재 각 지역의 성폭력상담소들에 의해 부산, 대구, 전주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생존자 말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권김현영(2011), 권김현영·시타·여린(2003), 권김현영·김민혜정·변혜정(2011), 마도(2011), 아오리(2011), 한세(2011) 참조.

찾기 행사(Take back the night)는 여성들이 자유롭게 밤길을 다닐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 행사는 안전한 밤길을 보장하라는 대정부 시위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밤길을 노니는 여성들의 축제이기도 하다. 더불어 성의 상품화를 조장하는 미인대회 중계 반대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고, 성매매 반대를 위한 범국민캠페인 등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이 분야의 연구활동은 반여성폭력운동을 성찰적으로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케 하는 또 다른 주요한 축이다.

반성폭력운동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원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주로 주부와 대학(원)생들이 상담 자원 활동, 사무보조 자원봉사, 행사기획단 등으로 활동한다. 대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자원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이후 본격적인 여성운동가로 성장하기도 하고, 회사에 취직해서도 매 행사에 지속적인 참여는 물론 후원회원을 모으는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가정주부로 있다가 상담원이 되어 활동하는 많은 주부들은 상담소 활동을 통해 자율적 여성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변화하게 된 계기였다고도 한다. 뿐만 아니라, 법조인, 의료인, 학자 등의 전문가 집단에서도 함께하고 있다.

그동안 NGO 활동 중 눈에 띄는 성과는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한국의 경우, 거의 황무지였던 여성폭력 관련법과 정책이 지난 20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마련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24시간 핫라인과 원스탑지원센터가 설치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성폭력상담소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반여성폭력운동단체들이 꾸준히 법안마련을 요구하고, 거리 캠페인·토론회 개최·기자회견·언론활용 등의 다양한 전략을 사용해오고 있다. 또한 활동가들이 각종 정부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각 정책에 대

한 모니터링 및 비판, 의견제시 등을 하기도 한다. 여성계만이 아니라, 시민운동과 연대해 여성폭력 관련 주요사건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나 여성폭력 관련 법안 제·개정활동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권, 노동권, 평화, 환경운동 등에도 연대한다. 국제적 네트워킹은 주로 국제회의의 참여나 공동캠페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으로 서명운동을 국제적으로 함께하기도 한다.

미디어는 반여성폭력운동과 ‘때로는 같이, 때로는 따로’ 가면서 약간의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사건들을 이슈 화이팅 하는데 언론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언론의 주된 관심은 누구나 공분할 수 있는 어린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남편을 살해하는 등의 극단적인 사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보도의 접근방법이 매우 선정적이고 일회적이며, 피해자의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연대해서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 또 때로는 TV의 메인 뉴스나 토포프로그램에 활동가들이 출연하여 성폭력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내는 역할도 함께하고 있다.

5. 맺음말

이제 어느 정도 틀을 갖춘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외적 성장이 실제 여성들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 반성폭력 법·정책이 구체적으로 풀어갈 과제로는 첫째, 성폭

력 범죄에 대한 신고죄 전면 폐지. 둘째, 형사사법절차 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셋째, 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의 안정화. 넷째, 성폭력특례법의 처벌 조항을 형법으로 일원화. 다섯째,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개인정보 집적 폐지. 여섯째, 반성폭력 감수성 향상을 위한 공교육 내 통합적 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꼽을 수 있겠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그러나 법개정보다 더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난 한 논의과정을 통해 어렵게 마련된 법·정책의 이행과정에의 주목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수사실무와 재판과정, 피해자 지원과정에서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법실무가 성폭력 관련 법제를 쫓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한다. 무엇보다 해당 법과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이로 인해 일 상에서 성폭력 예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제정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척도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 하나 하나의 이행과정을 담당자의 인식점점으로부터 시작해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반 성폭력 법과 정책의 지향점을 다시 세워야 한다. 결국 반성폭력 법제화에서 ‘성폭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왜 성폭력을 반대하는지 등의 근본적인 물음들에 다시 직면해야 한다.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제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인식은 우리사회가 피해생존자를 ‘보호할 대상’ 이거나 ‘의심과 비난’ 하는 양극단으로 위치 지우는 것에 대응할 근거를 열어주었다. 또한 대부

분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현실은 젠더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진단할 수 있게 했다. 나아가 성폭력이 성충동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좀 더 힘(권력)있는 사람이 그 힘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인권 침해라는 점은 성폭력문제의 심각성과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남자어린이나 남성피해자들의 문제를 이해하게 했다.

지금까지 법·정책에서 성폭력 문제해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음에도, 아직 대중과 호흡을 통한 일상의 실천을 끌어내지는 못한 이유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대중들이 인식하는 성폭력이 과연 인권존중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무력하고 불쌍한 피해자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의 접근인지를 살펴보면 오히려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의 처벌강화 위주의 법·정책이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노력은 하지 못했음을 반증해 준다.

이제, 우리사회는 성문화가 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폭넓은 연구,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인권운동단체와 학계, 정부 유관기관, 법조계와의 끊임없는 대화, 소통이 요구된다. 또한 지금 우리에게는 때로는 현상을 비틀면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가 하면 때로는 핵심을 찌르는 명쾌함과 함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어우러지는 새로운 상상력과 열정이 필요하다. 그 상상력과 열정은 지금까지 법조인들과 반성폭력 법·정책운동가들이 꿈꾸어왔던 것들을 조금씩이나마 현실로 만들어 왔던 성과를 넘어, 진정한 변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여성특별위원회(1998). 「여성관련 법률의 입법과정 및 향후 과제」, 국회여성특별위원회.
- 김보연(2006).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 과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선영(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김현정(2000). "여성운동과 국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성폭력특별법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류병관(2011).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 미국의 범죄피해자 권리법(2004)을 중심으로". 한국피해자학회(편), 『피해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35-56쪽.
- 민경자(1999). "성폭력 여성운동사".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한국어 성의전화 역음, 한울아카데미.
- 박선미(1989). "강간범죄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선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변해정(2008).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법/경험의 틈새를 성찰하는 '피해자'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24권 3호 111-145쪽.
- 신상숙(2007).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제도화와 자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여성가족부(2011). 2011. 4. 25. 보도자료.
- 오승이(2011).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방안". 「젠더법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사건 재판절차 개선방안」심포지엄 자료집(2011. 1. 7). 젠더법연구회.
- 유엔(2008[2006]). 「여성폭력 종식: 담론에서 행동으로」, 여성부(역). 여성부(United Nations, Ending Violence Against Women from Words to Action).
- 이경환(2011). "정부의 성폭력가해자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 토론회 자료집(2011. 11. 28).
- 이경환·이미경·장임다혜(2011). "법의 '객관성'을 재구성하다".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 이매진.
- 이명선(1989). "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 피해여성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미경(2012).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2012). "반(反)성폭력 정책의 흐름과 최근 쟁점". 「미래여성정책포럼」의 석수열리티 및 반폭력분과 워크숍 발제문(2012. 4.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미간행).
- 이상덕(1997). "성폭력특별법 입법과정에 대한 분석적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이재상·이호중(1992).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편), 『형사정책연구』, 제3권 3호, 61-113쪽.
- 이종걸(1992). "성폭력특별법 제정이냐, (형법)개정이냐?". 「성폭력추방운동 정책 토론회」녹취록, 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칭)(미간행).
- 이호중(2006). "형사절차와 인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편), 『한양법학』 제19집, 45-84쪽.
- (2007). "성폭력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성폭력 관련 형법개정안 공청회」자료집(2007. 2. 8). 여성인권법연대·임종인 국회의원 사무실.
- (2008). "성폭력 2차 피해의 근절을 위한 정책제언".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토론회 자료집(2008. 8. 11). 국회의원 최영희·한국성폭력상담소.
- 장애여성 공감(2011). "장애인 대상 성범죄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도가니법' 개악에 대한 입장" (<http://www.wde.or.kr/?hid=talk&cateno=65&ano=434>).
- 정도희(2009).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보호: 개정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정유석(2008). 성폭력 가해자 등록, 공개시스템: 반성폭력운동과 만나는 풍경. 「나눔터」 제62호, 한국성폭력상담소.
- 조지영(2011). "민주노총 내 성폭력사건의 논쟁지점과 그로 인한 사건 해결의 문제점". 「5,785개의 물음표를 풀다」2006~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사례분석 토론회 토론회문(2011. 11. 8).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미간행).
- 한국여성단체연합(2008). "여성인권 정책평가 및 향후 과제-대(對)여성폭력 정책을 중심으로".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토론회」자료집(미간행).
- 한인섭(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책". 한국피해자학회(편), 『피해자학연구』 제3호 33-52쪽.
- (2006). "성폭력을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 「판례바꾸기 운동, 그 두 번째, '최협의설 비판(2)'.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성폭력 보도과정에서의 2차 피해 없는 방송문화 만들기」, 한국성폭력상담소(미간행).
- (2012). "2012 평등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반(反)성폭력 정책 제안서"(미간행).
- 한국여성단체연합 외(2011). "2006~2009 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한국정부보고서에 대한 NGO Report". 한국여성단체연합·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여성인권을 지원하는사람들·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공익변호사그룹공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 한국여성연대(2011).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제도 점검 및 개선방안」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 토론회 자료집(2011. 12. 13)(미간행).
- Corrigan, Roseann(2004). "Talking to Strangers: Feminism, Sexual Predators and Rape Law Reform". Ph.D thesis, New Brunswick: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unpublished).
- Jung, Kyungja(2002). "Constitution and Maintenance of Feminist Practice: A Comparative Case Study of Sexual Assault Centers In Australia and Korea". Ph. D thesis, Sydney: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unpublished).